

OECD아시아사회정책센터의 개관에 거는 기대



김 근 태
보건복지부 장관

우리나라가 OECD 가입 후 10년도 안된 시점에서 OECD 아시아 사회정책센터를 설립하고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하였다. 이는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과 아시아 비회원국간의 사회정책분야에서 가교역할의 적임자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며 국제사회에서 그만큼 우리나라의 위상이 커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.

이러한 결과는 그동안 우리나라가 급속한 경제성장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꾸준히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, 국민연금, 건강보험 등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우리의 특성에 맞는 복지모델을 개발·정착시킴으로써 개발도상국에게 새로운 모범을 제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결과라고 생각된다.

최근 아시아 지역의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이 지역에 대한 세계의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고 OECD 또한 아시아 지역경제와 상호협력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시점이다. 특히 아시아 지역의 두 회원국 중 하나인 우리나라에 OECD 아시아 사회정책센터를 설립하여 OECD와 아시아지역 비회원

국을 연결하는 가교역할을 수행토록 한 것은 그만큼 우리의 국제적 위상이 크다 하겠다.

앞으로 OECD 아시아 사회정책센터는 우리나라의 대 개도국 아시아권 협력사업의 경험과 OECD의 발전된 사회정책 역량지원을 결합한 시너지를 추구함으로써 아시아 국가들의 사회정책

발전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.

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 각 국들은 평균수명 증가와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고령화, 빈곤, 그


리고 국민의료비 급증과 같은 사회문제에 당면하고 있다. 또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나타나는 사회구조의 양극화, 사회갈등의 증가 등 복지환경의 변화는 새로운 사회정책을 요구하고 있다.

이들을 해결하기 위해 유사한 사회현상을 겪었던 다른 나라의 정책사례를 분석하는

것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사회정책센터가 OECD의 사회정책경험을 아시아 상황에 접목하여 연구하고, 새로운 방향과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면 아시아 지역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다.

현재 우리나라는 고용친화적 사회정책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빈곤층의 자

립·자활을 빈곤대책의 핵심으로 상정하고 있다. 또한 선진국들의 정책경험을 참고하면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대책을 수립 중에 있고 고령사회에

지속가능한 연금제도를 만들기 위해 연금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. 그리고 장애인, 이민자 등 우리사회의 소수계층에 대해서도 차별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사회통합을 이루고자 온갖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. OECD 사회정책센터가 이러한 모든 고민을 담아내고 해결할 수 있는 장이 되길 기대한다. 

앞으로 OECD 아시아 사회정책센터는 우리나라의 대 개도국 아시아권 협력사업의 경험과 OECD의 발전된 사회정책 역량지원을 결합한 시너지를 추구함으로써 아시아 국가들의 사회정책 발전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.